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8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최민희 · 정춘생
박은정 · 김준형 · 황운하
김재원 · 이해민 · 김선민
신장식 · 서왕진 · 진선미
백선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(이하 “협약”이라 함)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.

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·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

고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)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는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장애인 차별 해소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입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조약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조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조약 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조약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조약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조약 이행을 위한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조약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조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약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

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조약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국가는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장애인 차별 해소와 관련하여 국가가 가입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3(조약 이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및 그 밖에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조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(이하 “조약 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조약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조약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</u> <u>2. 조약 이행을 위한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</u> <u>3. 조약 이행을 위한 자원 조달</u>

및 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조약 이행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
인정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약 이
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
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
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
한다.

④ 그 밖에 조약 이행계획의
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